

## 종합·해설

## 대권노리는 孫 VS 당권노리는 朴 '정면충돌'

학규

지원

孫 “범야권 통합 전대”  
朴 “단독 전대후 통합”

지역위원장 지지 기반

민주당 중심 통합 추진

혁통·지도부·친노그룹과

‘원샷 통합’ 논의 주도

야권 통합의 방법론을 놓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진검 승부’가 펼쳐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의 지도부 체제를 바탕으로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세력과 야권 통합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음 달 17일 ‘원샷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는 야권 통합은 민주당 중심으로 당현·당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당내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야권 통합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합 정당의 주도권을 놓고 당내 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손 대표는 한편 당내 세력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당현·당규에

따라서, 야권 통합이 어떠한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손 대표는 이번 통합을 암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 있는 형편이고 박 전 원내대표도 당내의 지지 세력의 뜻을 관찰시켜야 당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손 대표가 유리한 국면이다. 우선, 통합의 명분을 선점한데다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 등 현 지도부와 당내의 친노 그룹 등이 손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세력들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 손 대표의 통합 행보에 우호적인 모습이다.

손 대표가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합 정당 연석회의 등을 거쳐 통합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합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지도부의 통합 논의에 반대하는 당내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 전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 1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내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당현과 당규에 따라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당 밖에서는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서명 작업이 속도를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17일 오전에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 선출과 합당 등을 결의한 뒤, 오후에 통합 정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절차성이 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손 대표가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합 정당 연석회의 등을 거쳐 통합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합

전당대회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의 지도부는 통합의 수임기구가 아니며 당현·당규에 따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내의 반발이 구체화된다면 통합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차질을 빚으며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17일 오전에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 선출과 합당 등을 결의한 뒤, 오후에 통합 정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절차성이 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기관·시민사회단체 등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 기관·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 ‘5·18 삭제 규탄’ 온라인 서명 하루새 4000명

## 광주연석회의,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 공동대응키로

정부가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하기로 한 대 규탄의 목소리가 온라인

를.”이라고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시는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다음달 25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 기관·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5일 광주시청에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와 연합을 위해 대표단 및 실무 집행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소수의

자의적 집필기준 마련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국회 의원들에 5·18 등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된 현 집필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역사 교과서 뿐 아니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도록 하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에도 광주지역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부 왜곡된 역사의식 큰 문제”

## 집필기준 반발 사퇴 이익주·오수창 교수 인터뷰

일 교과부 장관이 ‘역사교육과정개발 정책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내용 중 ‘민주주의’ 관련 항목을 ‘자유민주주의’로 임의로 변경해 고시하자 ‘절차상 부당하고 학문상 부적절하다’며 9월초 역주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오 교수도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과정 고시는 집필기준이 전에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정책연구 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것을 정부 측에서 고쳐서 고시해버렸다”며 “강하게 정부 측에 항의하고 역주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법에 대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집필기준 논란과 관련, “집필기준을 봤는데 독재라는 명



이익주 위원장

오수창 교수

확한 서술이 없고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다. 뉴라이트 측의 손을 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대로라면 곧이어 정해지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영향을 미쳐 역사왜곡이 벌어질 것”이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이번에 나온 집필기준을 취소하고 최소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환원하면 된다. 그러려면 교육과정 고시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 구도청업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제작방법: (1)수제작 (2)제작방법

제작장소: (1)제작장소 (2)제작장소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제작방법: (1)수제작 (2)제작방법

제작장소: (1)제작장소 (2)제작장소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제작방법: (1)수제작 (2)제작방법

제작장소: (1)제작장소 (2)제작장소

전국  
점령

서울 신임점(한국화재) 02)279-0657~0658 강남점(한국화재) 02)277-5110 종로2가점(한국화재) 02)273-0220 솔파점(성총영) 02)410-2308 경기  
안양점(한국화재) 032)421-2289 부평점(부평화재) 032)571-5110 수원점(남양화재) 031)246-8655 안양점(백산화재) 02)2011-0107  
화성점(화성화재) 031)366-0101~0106 오정점(한국화재) 031)078-4163 부천점(한국화재) 032)329-4040 남양주점(한국화재)  
호평점(호평화재) 070)862-9903 청천점(한국화재) 031)079-2246 용인점(한국화재) 031)288-2246 경기  
하남점(한국화재) 031)274-1006 남양주점(한국화재) 031)268-2200 광주점(한국화재) 031)707-2200 충청남도  
용인점(한국화재) 031)425-4440 광주점(한국화재) 031)253-2200 충청북도  
화성점(화성화재) 031)424-5742 광주점(한국화재) 031)253-5742 충청북도  
전북점(전북화재) 031)253-5742 광주점(한국화재) 031)253-5742 충청북도  
전남점(전남화재) 031)253-5742 광주점(한국화재) 031)253-5742 충청북도  
전북점(전북화재) 043)862-1414 강원점(한국화재) 033)647-0658 충청점(한국화재) 031)253-5110 제주  
제주점(한국화재) 064)753-4358